

“회생·파산은 처벌 아닌 재기의 새로운 출발선”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 인터뷰

3년 늦어진 출범...서남권 전문도산 사법 본격화 낙후된 지역 경제 현실 반영 맞춤 실무준칙 예고

“회생과 파산은 처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 수 있도록 돕는 재기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김성주 초대 광주회생법원장은 4일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개인과 기업의 ‘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도산법원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 채무자를 향한 의심과 낙인에 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회생법원은 당초 2023년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정치적 논의 과정에서 개원이 미뤄지며 3년 늦게 문을 열었다. 수도권·동남권에 이어 서남권에도 전문도산 사법 체계를 구축하려던 구상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오를 셈이다.

그동안 도산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파산부기 맡아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 법원들 사이에서는 ‘광주는 엄격하고 결정이 늦다’는 인식이 퍼지며 서울회생법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 법원장은 “예측 가능성이 낮으면 불신이 쌓인다”며 “판사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판단 기준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판사 복불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도산 재판의 한계를 ‘접근 방식’에서 찾았다. 민사·형사 사건과 병행하는 구조에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전제로 출발하기 쉽고, 재산 은닉에 대한 선입견도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법원장은



김성주 법원장

“경제활동에는 언제든지 위험이 따른다. 도산은 범죄가 아니라 경제적 위기의 결과일 수 있다”며 “회생법원은 가정법원처럼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생 제도를 알지 못해 일가족이 모두

숨진 사건과 강력 범죄로 이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홍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광주경영자총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회생·파산 제도를 적극 알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회생법원은 광주지법 관할 사건을 이관받아 운영 중이다. 전주와 제주 지역은 중복 관할로, 당사자가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 김 법원장은 “전자소송이 정착된 만큼 물리적 거리는 큰 제약이 아니다”며 “전문성과 신속성을 인정받는다 면 전북·제주에서도 광주를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 사건 당사자들에게 전문법원 이송을 안내하고, 새 실무준칙을 공개해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실무준칙은 서울·부산·수원 회생법원의 기준을 참고하되, 서남권의 경제 현실을 반영해 조정할 방침이다. 그는 “서울과 지방은 자산 규모와 생활 여건이 다르다. 동일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지역민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3월 말

에서 4월 초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법원은 6명으로 출발한다. 김 법원장은 “접수 사건 수를 기준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이 늘면 증원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기 부담은 불가피하지만 철저한 준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회생에 대해서는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파산으로 가면 일자리와 기술이 사라진다”며 “채권자 보호와 기업 존속이라는 두 가치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살리는 회생’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면책 이후 경제적으로 회복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일부를 추가 변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법원장은 “채권자와 채무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며 “모두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상생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예보 06:58 달맞이 20:25
맑음 18:31 달맞이 07:38



광주	구름	2~16
목포	구름	2~14
여수	맑음	5~12
순천	맑음	3~13
구례	맑음	2~16
광주	맑음	0~14
진도	맑음	3~15
목포	구름	3~10
고흥	맑음	2~14
진도	맑음	1~13

목포	미물(고)	03:20 / 15:45
	샘물(저)	08:32 / 20:53
여수	미물(고)	10:25 / 22:41
	샘물(저)	04:05 / 16:21

광주 부끄러니 80억, 발행 이틀 만에 ‘완판’

15% 선할인·발행처 확대·가맹점 2만곳 확대 효과

광주 북구의 지역화폐 ‘부끄러니’가 발행 이틀 만에 전량 소진됐다.

4일 북구에 따르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날 발행한 80억원 규모의 부끄러니가 이날 오전 10시께 완판됐다.

이는 작년 부끄러니 발행 당시 완판 기간보다 나흘가량 앞당겨진 것이다. 북구의 부끄러니는 광주 자치구 지역화폐 중 2년 연속 가장 빠른 판매 속도를 기록했다. 이번 조기 소진은 부끄러니 활성화를 위한 북구의 다양한 노력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먼저 북구는 올해 15% 선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부끄러니와 비슷한 성격의 온누리상품권(할인을 7%)·광주상생카드(할인율 10%)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

한 점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 부끄러니 구매처를 기존 북구 내 광주은행(18개소)에서 광주전역(67개소)으로 넓혀 카드 발급을 한층 수월하게 한 것도 소진 속도에 불을 붙였다.

음식점·마트·학원 등 생활 밀착 업종 중심으로 구성된 2만 개가 넘는 가맹점은 평소 생활반경 내 어디서든 부끄러니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발행 첫날 북구청 광장에는 이른 시각부터 대기행렬이 이어졌고 대기자에게 배부하는 번호표마저 조기 소진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첫날에만 전체 발행액의 78.4%인 62억원이 판매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솔로우조깅단’ 발대식 4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린 ‘솔로우조깅단’ 발대식에 참석한 풍암·상무·치평·화정·유덕·동천·금호 등 6개 권역 주민들이 함께 단체 조깅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전남 사립대 신입생 등록률 ‘경춤’

호남대 ‘정원 내 100%’ 등 대부분 99%대 달성 학령인구 10% 증가·대학별 특성화 전략 영향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대부분 99% 안팎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요권 대학의 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조선대학교는 정원 내 4341명 모집에 4335명이 등록해 99.86%의 등록률을 보였다. 모집 인원이 가장 많은 대학임에도 사실상 정원을 채운 셈이다.

호남대학교는 정원 내 1502명 전원이

등록해 100%를 달성했다. 전년도 정원 내 등록률 95%와 비교하면 5%p 상승한 수치다.

광주대학교는 신입생 1392명(정원 내 1320명·정원 외 72명)을 모집해 1387명 이 등록, 충원율 99.6%를 기록했다. 최근 8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동신대학교 역시 정원 내 1457명 가운데 1451명이 등록하며 99.6%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지역 사립대들이 높은 등록률을 유지한 배경으로는 대학별 특성화 전략이

꼽힌다.

학사 구조를 유연하게 재편하고,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한편 산학협력 확대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힘쓴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대학가에서는 2007년 ‘황금돼지해’ 출생 인구 증가로 올해 입학 대상자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전년보다 약 10% 증가한 환경적 요인이었지만,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자구 노력이 더해지면서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광산구,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선정

광주 광산구는 4일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인사혁신처의 퇴직 공무원 사회공헌 신규사업 사회통합 분야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고독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사람 중심 지역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4일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가족·이웃과 단절된 위기 대상자가 빠르게 늘고, 무연고 고독사 사례도 늘고 있다. 또 신청 중심의 현행 복지 전달체계로는 위기 상황에 즉각 대응이 어려운 현실

이다.

이에 광산구는 “먼저 찾고, 있고, 연계하는 천사(1004) 복지 매니저” 사업으로 관계 단절 등 위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해소하는 복지 체계의 재구조화를 시도한다. ‘1004’는 단 한 사람(1)도 놓치지 않으며, 고립 없고(0), 고독사가 없는(0) 사회를 목표로 사람·이웃·마을·행정의 4중 보호 체계(4)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광산구는 사회복지직, 간호직으로 일하다 퇴직한 공무원 6명을 고립과 고독사를 막는 ‘천사 복지 매니저’로 선발해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한다. 임영호 기자

호남대 ‘정원 내 100%’ 등 대부분 99%대 달성

학령인구 10% 증가·대학별 특성화 전략 영향

광주·전남 지역 주요 사립대학들이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대부분 99% 안팎의 등록률을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수요권 대학의 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남대학교는 정원 내 1502명 전원이

등록해 100%를 달성했다. 전년도 정원 내 등록률 95%와 비교하면 5%p 상승한 수치다.

광주대학교는 신입생 1392명(정원 내 1320명·정원 외 72명)을 모집해 1387명 이 등록, 충원율 99.6%를 기록했다. 최근 8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남 나주에 위치한 동신대학교 역시 정원 내 1457명 가운데 1451명이 등록하며 99.6%의 등록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지역 사립대들이 높은 등록률을 유지한 배경으로는 대학별 특성화 전략이

‘매년 1000건 이상’ 층간소음...범죄 부른다

광주·전남지역 층간소음 갈등이 해마다 1000건 이상 반복되는 가운데 흉기 협박, 투신 자살 등 사고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구조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접수된 상담 건수는 광주 3120건, 전남 2118건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광주는 2021년 603건, 2022년 666건, 2023년 645건, 2024년 602건, 2025년 604건으로 매년 600건 안팎을 기록했다. 전남은 2021년 415건,

2022년 400건, 2023년 409건, 2024년 406건, 2025년 488건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단순 민원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최근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용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러 온 건물주(71)에게 “시끄럽게 한 적 없다”며 격분한 뒤 주거지에서 들고 나온 흉기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A씨는 뒷집으로 올라간 뒤 출입문의 옆 벽을 흉기를 내리찍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아

파트에서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70대 남성이 방화 후 투신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더 이상 ‘생활 불편’ 수준이 아닌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에 나서고 있다.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도 의무화했지만, 전문성 부족과 권한 한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평가가 많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된 ‘층간소음 사후 남성이 방화 후 투신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준공이 본격화 되면 관련 분쟁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층간소음의 경우 형법상 공용물을 반복적으로 훼손하면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나 공용물 파손(제371조)으로 처벌할 수 있고, 고의적 보복 소음은 스토커징 처벌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해야 하고, 분쟁 해결을 통하더라도 현장진

단·측정 등에 수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자율 조정으로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신속 공동주거시설 전 세대 층간소음 전수조사와 국가 공인기관 실측 의무화,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법’ 제정을 입법 청원하기도 했다.

지역 한 변호사는 “현행 제도는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러 기준을 초과해도 직접적인 제재가 어렵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수개월 뒤 판결이 아니라 즉각적인 차단 조치다. 주거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